

광주·전남 사회적 기업 육성 3년

민간·복지서비스와 중복 수익만 따져 갈수록 축소

올해로 3년째를 맞은 광주·전남지역 사회적기업들의 사업분야가 여전히 민간서비스나 기존 복지서비스와 중복되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중앙정부에 의한 일률적인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지면서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보다는 영업에 따른 기업수익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어 애초 설립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광주 12개, 전남 17개이며, 예비사회적기업은 광주 19개, 전남 21개 등 모두 69개의 사회적·예비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120여 곳에 달했으나, 당시 노동부가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면서 예비사회적기업 상당수를 수익성이 적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무더기 탈락시켜 그 수가 급감했다.

사회적기업의 주체도 시민단체·장애인단체·사단법인 등에 한정돼 있고, 지원시설도 없어 ▲노무·회계·경영 등 전문성 미흡 ▲수익률 저하 ▲지원 중단 등의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

사업분야 역시 간병·가사서비스,

▲사회적기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인 목적과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곳을 말한다. 수익이 적어 자립할 수 없는 곳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직원 1인당 인건비 93만2000원의 지원을 받는다.

폐기물 재활용·결식이웃지원·제과제빵·육아·집수리 등 기존 공공·민간부문과 중복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수준이다.

또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문화중심도시사업을 추진중인 광주는 문화·미디어·경제분야에, 고령사회에 접어든 전남은 노인지원·지역특산물 개발 등의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최근 강운태 광주시장은 광주를 방문한 임태희 노동부장관을 만나 “광주의 사회적기업들은 지역특성상 문화예술분야가 많은데 정부가 수익성 만을 평가해 무려 30%를 탈락시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자율기자 dok2000@kwangju.co.kr

“파업 안하면 현대차 만큼 보상하겠습니다”

기아차 서영종 사장 노조에 제안…성사 여부 관심

20년 연속 파업을 눈앞에 둔 기아차는 차주에게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노조에 제안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들어 스포티지R과 K5 등 신차 돌풍으로 현대차를 터밀까지 추격한 기아차는 지난달의 경우 중순까지는 판매에서 현대차를 앞질려 국내 자동차업계 1위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노조가 주말특근을 거부하면서 막판에 순위가 뒤집힌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기아차에 따르면 서영종 사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여러분이 지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에서 “올해 19년 연속 파업의 고리를 끊어내고 무파업을 실현한다면 경쟁사에 뒤지지 않는 무파업 보상을 약속한 것이다. 지금까지 기아차 노조는 급여와 상여 등에서 현대차와 같은 수준의 대우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현대차는 지난해 15년 만의 무파업에 대한 보상을 1인당 400만원 상당의 무상주 4주를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무파업 보상 제안은 교섭장에서 할 얘기”라며 “사측은 교섭장으로 나오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아차 노조는 7일 광주공장에서 교섭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오는 16일 제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고강조했다.

사실상 기아차 노조에 현대차와 같은 수준의 보상을 약속한 것이다. 지금까지 기아차 노조는 급여와 상여 등에서 현대차와 같은 수준의 대우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현대차는 지난해 15년 만의 무파업에 대한

보상으로 1인당 400만원 상당의 무상주 4주를 지급한 바 있다.

국무총리실은 5일 총리실 공직윤리기준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이인규 공직윤리기준관 등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조원동 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지난 2~4일 이 지원관과 접점 1팀장, 조사관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사무차장은 “조사 과정에서 협법상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명백히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총리실은 이를 중 뒤늦게 팀에 합류해 민간인 조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관 1명을 제외한 3명에 대

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하고 일단 직위 해제 조치를 취했다.

조 사무차장은 이 지원관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직보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 이인규 공직윤리기준관 등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영일·포항 공직자 모임인 ‘영포회’와 관련성에 대해서는 “영포회 가입 여부는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답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장마 사이 무더위

5일 광주 최고 기온이 30.1도를 기록한 가운데 광주시 서구 운천저수지 분수대에서 아이들이 뿐어놓은 물줄기 사이를 뛰어다니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삼호지구 골프장만 늘어나나

서남해안레저, 27홀서 72홀로 증설 추진

타 지구 사업자 반발 J프로젝트 지연 우려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일명 J프로젝트) 삼호지구내 골프장이 개발계획 승인 당시보다 늘어날 것 보여 골프장 수를 놓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삼호지구의 골프장 증설에 대해 J프로젝트내 다른 사업지구 시행자들과 광주·전남지역 기존 골프장들도 반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자칫 J프로젝트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삼호지구 개발사업을 맡고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인 서남해안레저(주)가 개발

계획인을 수정해 지난 1일자로 전남도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삼호지구 실시계획안은 866만1000m²의 면적에 총 사업비 4천470억원을 들여 스포츠단지, 승마장, 마리나, 신재생에너지단지, 골프장 등을 2025년 까지 건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가장 큰 변화는 골프장을 당초 27홀

에서

72홀로 증설하고 주거용지를 전

체 면적의 7.9%에서 18.0%로 늘린

것이다. 문제는 골프장으로,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18홀 기준으로 1.5개이던 골프장이 4개로 늘어나게 된다.

2007년 말 사업지구별로 총 22개

(삼호지구 3개, 구성지구 9개, 초송지구 10개)의 골프장 건설을 신청했지만 환경부가 환경파괴와 골프장 수 과다를 이유로 17개(삼호지구 1.5개, 구성지구 7개, 초송지구 8개)만 승인했는데 뒤늦게 삼호지구가 증설을 틀고 나왔기 때문이다.

경쟁 사업지구의 한 관계자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중앙부처의 협의와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께 승인이 완료되면 12월부터는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타 사업지구 시행자와 광주·전남지역 골프장 운영자들이 사업지연과 과당 경쟁에 따른 수익성 저하를 우려해 반발하면서 골프장 수 적정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007년 말 사업지구별로 총 22개

A골프장 관계자도 “개발계획 승인 당시인 지난해 말 협회 명의로 골프장 수를 줄여 줄 것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늘게 됐다”며 “당초 계획대로 17개만 생겨도 현재 운영중인 전남 골프장의 73%에 달해 심각한 공급과잉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민간인 사찰’ 총리실 4명 수사 의뢰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끼름다른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희망!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및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